

전북자치도 출범 후 전주·완주 상생협약

‘전북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 10차 협약

전주·완주 등 지역 상생·협치 의지 재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완주군 상관 저수지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10차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1차 협약 사안인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대상지인 상관저수지에서 마을주민 2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양 지역 주민복지 증진과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지를 굳건하게 재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10차 협약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전북혁신도시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전북혁신도시 인근 이서면에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에 양 지역에 손을 맞잡았다.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양 지역의 생활체육과 관광,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까지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총 10차 협약을 통해 교통, 문화, 경제, 교육 등 24개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추

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10차 상생협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스포츠를 통한 양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 복지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힘써 달라”며 “아울러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약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 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10차 상생협력사업은 완주 전주가 맞닿아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인 혁신도시 내 생활 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 지역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상생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간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온 24개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추진되는 사업들 또한 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정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10차 상생협력사업은 통합관련 논란을 불식시키고 상생협력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진행하기 위해 1차 협약 사업 대상지인 상관 저수지에서 협약을 추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 시·군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익을 위해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한 분야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양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농업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공모 선정

남원·완주 등 2곳... 국비 각각 15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확대되고 있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업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 공모에 남원시, 완주군이 선정돼 국비 15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작년 정읍시, 고창군에 이어 2회 연속 공모선정이다.

2024년 농촌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3개년(2024~2026년) 사업으로 지역거점형(100인 내외 수용)과 마을공동형(50명 내외 수용) 등 2개 사업 유형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남원시, 완주군에서 공모 선정된 유형은 마을공동형으로 이는 마을 단위로 외국인근로자 50명 내외를

수용하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총 8개소를 선정했으며, 3년간(2024~2026년) 총 사업비 30억원, 개소당 1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 인력 수급 대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도와 시·군이 함께 농식품부 공모평가에 사전 대응 및 선정위원회 현장 평가 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전달하고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농촌 고용 인력 확보가 용이해져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양충모) 및 위원들에게 임용장 수여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충모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7일 공식 업무 시작

감사위원 총 6명 위촉

양충모 제1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이 7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양충모 감사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은 제40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이뤄졌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7년 2월 6일까지이며, 앞으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대상 기관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합리성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해 그 결과를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양충모 감사위원장이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청렴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추진 하겠다”면서 “적극행정 환경조성, 공직사회 투명성 및 공정성,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정성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펼쳐지도록 하겠다”면서 “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외부 압력은 기필코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전라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가천대 경영학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 제4대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했다.

이날 감사위원장 임명과 함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6명도 위촉했다.

감사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도지사, 도의회, 도교육감으로부터 각각 2명씩 추천받아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2027년 2월 6일까지 3년 동안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재훈 기자

김성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 취임

김성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김성규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김성규 원장은 앞으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을 지휘한다.

김성규 신임 원장은 “K-콘텐츠와 디지털 융합산업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으로써, 콘텐츠와 ICT융합산업 육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사회·문화에 기여하여 전북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규 원장은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했으며, 원광대학교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창업지원단장,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장, 융합SW교육원장 등을 수행했다. 또 (주)강방송에서 18년동안 재직하며 보도·제작국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시군간 부단체장 회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역점사업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1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국가예산 신규사업 추가 발굴, 전북특별자치도 2단계 특별발굴 추진 등 도-시·군 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해 시군과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설 명절 도에서 수립한 민생안정 종합대책 4개 분야 15개 과제를 토대로 각 시·군별 종합상황실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이행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단체장 중심의 신속집행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공공기관·민간에 신속집행 자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1분기 내 재정 지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도정목표, 정부정책 등 전북자치도와 연계되는 2025년~2026년 국가예산 신

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기 발굴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논리를 구체화해 3월부터 적극적인 부처 설명 활동을 주문했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핵심분야별(재정, 이민, 신산업, SOC 등)산업체 현장 간담, 정책 동향 조사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전북특별법’ 특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보완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온라인 특별발굴실 운영 홍보 등 도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발굴해 줄 것을 시·군에 주문했다.

그밖에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지원과 공무원 선거 중립 등 공명선거 추진 협조와 특히 명절 연휴 동안 귀성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포장 불량구간 포트홀 및 노후·파손된 도로표지판 정비 등 시·군 합동점검 협조를 요청했다.

시·군에서도 새만금 산단 공공폐수 처리장 신설 건의와 국도26호선(완주소양~진안 부귀)도로 개량사업 추진 등 도의 협조 요청과 중앙부처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